

설 선물 되팔이 성행...위생·과세 '관리 시각'

미개봉 식품 개인 간 거래...관리·처벌 기준 모호 동일제품 반복 판매로 사실상 무신고 영업행위도

설 명절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각종 선물세트가 대거 매물로 쏟아지면서 식품류 재판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일 품목을 반복·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성행하면서 사실상 무신고 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상 단속 기준이 모호한 탓에 '관리 시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선물용'을 내세운 설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다. 나주배, 굴비, 참치·햄 세트 등 품목도 다양했다.

실제로 광주 서구 금호2동 한 작성자는 굴비 선물세트를 8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내산 참조기 22cm', '냉동보관중' 등 문구가 달렸고 8명이 거래 문의를 했다.

광진구 신흥동의 한 작성자는 나주배 선물세트 7.5kg을 3만5000원에 내놓았다. 일부 판매자는 동일 제품을 여러 세트 게시하거나,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완료 표시가 잇따르며 실제 유통 규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명절선물 중고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처분인지,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복·계속적 판매는 영업으로 볼 소지가 크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생활용품 처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굴비 등은 유통 과정에서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나 택배 배송이 흔해 있고, 판매자의 보관 이력도 검증이 불가능하다. 변질·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무 관리 역시 시각지대다. 일정 금액 이상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소득 발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거래 대부분이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이뤄져 과세 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는 명절 직후 다량의 선물세트를 연속 게시하며 가격을 조정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기 유통상'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그릇·수저 세트, 매생이, 떡국떡, 매생이, 포고채, 전통 간장 등) 매물도 등장했다. 공적 예산으로 제작·배포된 선물이 개인 거래 대상이 되면서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식품류 품목의 관리 공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위생 담당 관계자는 "개인 간 일회성 거래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반복적 판매는 영업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개인 거래가 급증한 만큼 최소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반복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단순 소비 형태 변화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 식품 안전과 조세 형평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맑음 07:11	달림 10:04
맑음 18:22	달림 --:--



광주	☀️	-1~12
목포	☀️	0~8
여수	☀️	1~11
순천	☀️	-1~13
구례	☀️	-2~12
광주	☀️	-1~11
신도	☀️	0~12
흑산도	☀️	3~7
진남	☀️	-3~12
진도	☀️	1~8

목포	밀물 (고)	06:06 / 18:08
	썰물 (저)	11:09 / 23:25
여수	밀물 (고)	00:39 / 12:39
	썰물 (저)	06:32 / 18:51

'5·18 항쟁지' 옛 전남도청, 시민 품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3년여간 이어진 복원공사를 마치고 시민에게 문을 연다. 시범 운영을 거쳐 5월에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은 5·18 관련 기념·교육 공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착공한 복원공사가 올해 1월 10일 준공됐다. 추진단은 24일부터 27일까지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한 뒤, 공간 구성은 사료 고증과 증언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내부에는 관련 기록물과 영상 자료가 함께 전시된다.

도청 별관은 방문자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역사실과 복원역사실을 통해 건물의 변천 과정과 복원 경과를 소개하고, 민주주의 교육 체험실을 마련해 청소년과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람 안내와 해설, 각종 교육 활동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옛 전남도청경찰 본관은 '민중의 저항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서구' 지난 20일 광주 서구 농성동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클래스'에 참석한 김문경 강사와 소상공인들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복원공사 마무리... 28일~4월 5일 시범운영 본관·별관 등 6개 공간·재현·추모·교육 기능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옛 전남도청 전시관을 시범운영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추진단은 방문객 동선과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거친 뒤 5·18 기념행사가 시작되는 5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원·개방되는 공간은 도청 본관과 도청 별관, 도청참관 본관, 도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등 총 6곳이다. 각 공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전시 콘텐츠와 상설 추모 공간,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도청 본관은 1980년 5월 열흘간 이어진 항쟁의 현장을 중심으로 복원됐다. 시민군 상황실과 기자회견실, 유족대표 협상실 등이 재현돼 당시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항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저수지 추락 아내 살인' 무기수 사후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년 만에 뒤집힌 판결 마무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우씨에 대한 사후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아내 살인 혐의로 복역하다 사망한 무기수 고 장동우씨의 사후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차량 압수 과정 등 일부 위법 수집 증거가 있고 고의 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공소사실처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후 20여년 만에 뒤집힌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수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살해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판결을 받아들여 사후 재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 현직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 소송 기록·현장을 재조사한 결과라며 '끼워 맞추기식' 수사 조작 정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반전이 일어났다. 이를 토대로 장씨는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66세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정식재판 청구...형량 기준

만년필 SNS에 글썽 영상 올려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법원이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형을 가중.

2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글썽적인 동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기소.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음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약식 명령으로 내리던 벌금 500만원은 과소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어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참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총장로 원도심에 'AI 문화플랫폼' 마련된다



시소총장 조감도

광주 총장로 원도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AI) 창의 문화복합공간 '시소총장'이 9월 정식 개관한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시소총장은 추억을 소재로 K-컬처와 AI 기술을 결합해 뉴트로 감성을 살린 주민체험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으며, 총장로5가 59-2번지 일대 부지면적 766.4㎡, 연면적 1415.67㎡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 건물에 건축물 조성비 72억원, 내부 콘텐츠

동구 110억 투입...9월 '시소총장' 개관 추억·기록 테마·카페·공연·체험 결합

조성비 38억원이 투입됐다.

'시소총장'이라는 명칭은 지난해 12월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소(時所)는 소중한 시간을 담아내는 문화복합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문화와 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사내(총장로)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중심이자, 놀이거주 '시소'처럼 누구나 즐겁게 오르내리며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

시소총장은 '기록'을 키워드로 한 3개 층의 특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1층은 '보는 것의 기록'을 주제로 전시, 독립서점형 서재, 총장축제 기록관, AI 인생네컷 스튜디오 등으로 꾸며진다. 기록 아카이브 전시와 연계해 사진·영상 상품 출력, 방문형 체험권 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수익 모델도 함께 운영된다.

2층은 '소리의 기록'을 콘셉트로 한 LP 청문관, 오픈홀, 음성 복원 및 라디오 존, 워크숍 존 등으로 구성된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술과 AI 음성 일기, 개인 맞춤형 음향 로그 제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과 클래스, 워크숍 등을 위한 대관 및 티켓 판매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와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3층은 '감정의 기록'을 주제로 한 카페, 창작 존, 굿즈 존, 감정 전시 존 등으로 조성된다. 감정 AI를 활용해 조명·향기·음향이 연동되는 체험형 카페에서 이용자의 감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총장로 4·5가 장인들과 협업해 로컬 스토리가 담긴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제작·판매하고, 추억을 소재로 한 먹거리 메뉴를 개발·판매함으로써 골목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